

## V. 스웨덴

### 1. 예산 현황

<표 V-1> 일반정부 규모 및 수지

(SEK billion, current prices)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	1,330	1,370	1,423	1,481	1,542
지출	1,305	1,365	1,412	1,449	1,498
순차입	25	4	11	31	44
중앙정부 재정수지	1	-44	-42	-14	-13
순부채	87	63	52	20	-24

자료: Statistics Sweden & Ministry of Finance

### 2. 중기계획

#### 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 BOTTOM-UP 에서 TOP-DOWN 방식으로의 전환 : 연평균 GDP 2% 흑자 달성의 장기적 목표 수립(1999년 : GDP의 0.5%, 2000년 : GDP의 1.5%, 2001년 : GDP의 2% 흑자 달성 목표) → 경제적 전망에 기초하여 이러한 목표로부터 총 지출 한도 도출 → 27개 지출 부문 각각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제시
- “27개 지출 부문에 대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 < 총 지출 한도” 이며 이 차액을 “예산 차액(budget margin)”이라 한다. 예산 차액을 두는 이유는 예견되는 실수에 대비하여 유보금을 비축함으로써 의회가 승인한 총 지출 한도를 수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C_{t+3} = R_{t+3} + \Delta T_{t+3} - (\text{GDP 대비 } 2\%) + \text{margin}$

	Budget margin>0	Budget margin<0
Surplus>2%	세입 감소 and/or 지출 개혁	지출 감소, 세입 감소
Surplus<2%	세입 증대(or 지출 감소)	지출 감소

- GDP의 2% 흑자목표 설정 배경 : 노인 인구의 증대에 따른 순부채의 감소와 초과 적자(GDP의 3%) 대비 안전한계(Safety margin)의 설정

나.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내용 : Spring Fiscal Policy Bill

- 계획기간 : 3년
- 작성주기 : 매년 연동 보완
- 포괄범위 : 중앙정부 지출 + Old Age Pension (크게 2부분)
- 중앙정부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지방정부 제외  
(단, 균형재정을 의무화. 위반시 일반 보조금 감축을 통해 제재하는 형식으로 통제)
  - 공기업 제외
- 표시형식 : 명확한 지출 통제를 위하여 명목가격으로 표시
- 작성절차
  - ① 1월 - 3월 내각회의에 앞서 MoF의 경제적 전망 예측
  - ② 2월 - 향후 3개년 지출 소요 제출 : 각 부처 → MoF

- 현 정책 유지시 지출 소요 / 새로운 정책에 의한 소요 전망 제시
- 새로운 정책에 의한 추가 소요 제출시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제출 : 기존 예산 삭감, 신규 수입 등

③ 3월 - 내각 회의 : 지출총액과 27개 기능 분야별 지출상한 합의

④ 4월 - 국회 제출 → 6월 - 국회 승인

□ 재정목표 및 주요내용

- 향후 3년간의 중기재정전망  
(재정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전망, 세목별 세수 실적 및 전망치, 국가채무&재정수지&재정의 지속가능성)
-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 상한 및 27개 분야별 지출 상한
- 당해연도 추경예산안

다. 중기재정계획과 단 년도 예산의 긴밀한 연계

□ 중기재정계획인 춘계재정계획(Spring Fiscal Policy Bill)은 예산안과는 별도의 예산과정이라기보다 예산안과 연계된 일련의 예산과정 중 하나

- 중기재정계획도 국회의 승인을 받음
-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에 대한 대의회 설명자료(Informative Document) 성격

□ 춘계재정계획과 예산안 모두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과 지출 분야별 지출 상한선을 포함

- 『춘계재정계획(6월) → 예산(12월) → 춘계재정계획(다음 해 6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된 경제전망 등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과 지출 분야별 지출 상한선이 계속 연동 보완
- 연동 보완되기는 하나 기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의 수치는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미세 조정만 받을 뿐 거의 변동 없음

라. 하향식 예산편성 제도 : 운영상의 융통성 +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TOP-DOWN 재원 배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재원배분을 개선하고 부문별 지출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을 강조

- 국회에서 2단계 예산심의 : 총액 → 부문별 예산심의
- 1996년 예산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 AGENCY에 대한 자율성 부여
- 지출에 대한 총량적 제한 대신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 예산사업의 대부분을 각 부처 감독을 받는 AGENCY(시행청)가 수행
- AGENCY의 재원 사용 계획은 감독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3개년 중기재정계획 작성(Spring Fiscal Policy Bill) → 내각 합의(3월)

- 재무부가 지출총액과 27개 기능 분야별 지출상한 결정
  - 각 부처 세부예산편성 : 27개 분야(3년) / 47개 정책분야(단년) / 500개 세출항목(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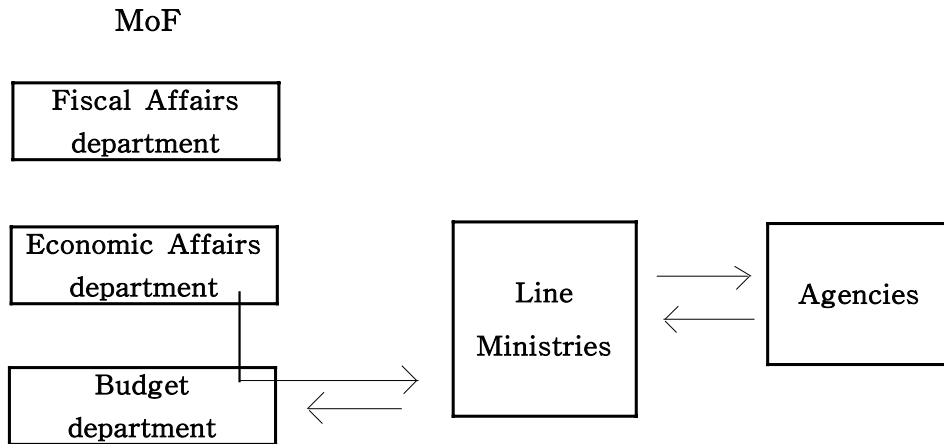
### 3. 예산 일정

총액 결정 → 지출 분야별 지출액 결정 → 정부승인문서

<표 V-2> 예산 일정

일정	의회	정부	시행청(AGENCY)
1월		재무부(MoF) : 3월 내각회의에 앞서 경제적 전망 예측	
2월		총계재정계획 준비 -향후 3년간 지출소요 제출 (각 부처→MoF) -기존정책이 유지될 경우의 지출 소요와 신규사업 소요를 제시	예산문서(t, t+i, t+2), 연간보고서(annual report)(t-1) 정부제출
3월		내각회의 (Spring Fiscal Policy Bill, 중기재정계획안 수립) : +3년차의 총액 및 지출 분야별 지출상한선 결정, +1·+2차년도 미세조정	
3월말		전년도 회계감사, 집행실적 분석·통보 (감사원→재무부)	감사보고서 정부 제출
4월		Spring Fiscal Policy Bill 의회 제출(4.15) -2년간의 실적, 금년 및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 분야별 지출 상한선, 세입 전망 중앙정부 연간보고서 의회 제출	
5월	Spring Fiscal Policy Bill 검토	재무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에 착수 (5월 중순 각 부가 재무부에 예산조안제출)	
6월	Spring Fiscal Policy Bill 의결	예산안의 수치작업	
7월		예산 협의·편성 작업 중단(휴가)	
8월		내각회의 : 향후 3년간 지출총액, 27개 분야별 지출액에 대하여 최종 합의, 9월까지 미조정	
9.20일		예산안(Budget Bill) 의회 제출 : 예산안에는 지출영역에 대한 한도액의 최종안이 포함되며, 각 세출승인에 대한 제안서가 포함된다	
10-11월	1단계 : 지출 분야별 한도 결정 - 재무위원회 → 본회의		
12월	2단계 : 지출분야내 항목별 예산 결정 - 각 상임위원회 → 본회의, 의회의 결정을 통해 예산 확정	정부승인문서를 통해 AGENCY(시행청) 예산안 작성 : 각 시행청의 목표와 재원 결정	

※ 중앙정부 예산 권한



- Fiscal Affairs department : 조세 입법, 조세 체계 분석 및 제안
- Economic Affairs department : 거시경제 전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 전망
- Budget department : 중앙정부의 자금 조달, 국가예산편성 절차

#### 4. 예산편성 방식

##### 가. 지출총액의 결정

- 결정기관 : 재무부 → 수상 → 내각 → 의회  
(대부분 재무부에서 정한 총액이 통과)
- 결정방식(고려요인)
  - 거시경제전망, 세수추계, 재정수지 목표(2%흑자),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출
- 재정원칙
- 거시경제 및 재정예측

나. 지출 분야별 지출 상한 결정

: 지출 총액 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27개 기능 분야별로 도출

□ 결정기관 : 재무부 → 수상 → 내각 → 의회

- 재무부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
- 동 초안을 수상과 상의하여 회의 안건 작성
- 내각회의에서 각 부처와 최종 협의 후 결정 (수상의 별장에서 1-2일내 결정)

□ 결정시 고려사항

- 각 부처의 지출계획안 제출내용
- 공약사항
- 재무부의 추정내용

□ 분야별 우선순위

□ 재량적 지출

□ 27개 지출 분야

1. 스웨덴 정치체제	15. 연구지원
2. 재정·경제 행정	16. 교육 및 대학 연구
3. 조세징수 및 행정	17. 문화, 언론, 종교 및 여가활동
4. 사법	18. 사회 계획 및 주택 공급 · 건설
5. 해외 정책행정 및 국제협력	19. 지역 균형 및 발전
6. 방위	20. 일반 환경 보존
7. 국제 발전 협력	21. 에너지
8. 이민자 및 망명자	22. 통신설비
9. 의료 및 사회보장	23. 농림·어업 등
10. 병약자와 장애인 지원	24. 사업부문
11. 노년층에 대한 재정지원	25. 지방교부금
12. 가족·자녀를 위한 재정지원	26.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13. 실업에 대한 재정지원	27. EU 분담금
14. 노동시장 및 근로조건	

#### 다. 부처별/회계별 상한

- 부처별 총액, 500개 예산항목, 47개 정책분야 등은 내각협의 결과를 감안하여 해당 지출부문을 담당하는 장관에 의하여 결정됨. 이 단계에서 재무부는 대체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각 부처 장관이 관할 예산안에 대해 보다 많은 결정권을 갖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순위의 사업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한다.
  
- 내각회의 이후 두 달 동안의 세부지출 내역 작성 후 5월 중순에 재무부에 보고 시, 개별 장관들의 각자의 예산안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 주는 징표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특정 지출영역에 대한 재정 증액에 상응하는 다른 지출 영역의 삭감 단행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의 각 부처에서 정한 특정 지출 부문에 대한 질문 제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라. 결정 과정

- 재무부 초안 → 수상과 사전 협의 → 내각회의(3월, 8월)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5. 합의

#### 가. 내각회의 방식 : 지출상한 합의 방식

- 개최 회수 : 12·3·8월 등 총 3차례
  
- 회의 기간 : 각각 1박 2일
  
- 회의 주제 및 참석 : 수상이 주제, 내각 멤버만 참석, 실무자 배석 금지
  - 수상이 직접 주재하고 수상별장 등을 활용하여 회의에 전념
  - 내각 멤버만 단독 참석, 실무자 배석 금지
    - 『내각 + 재무부 차관 + 수상실 차관』 참석
    - 수상실·재무부 실무요원들도 회의장 출입제한(다른 방 대기)
    - 그 외 부처 실무직원은 참석 불가

## □ 회의 안건

- 향후 3년간 지출총액 및 분야별 지출상한
  - 재무장관이 80-100 페이지 분량의 회의 자료를 작성·제출
  - Spring Fiscal Policy Bill 작성을 위한 별도의 제안서(내각예산회의 제안서), 예산국 직원 65명이 1개월 작업

## □ 회의 운영 방식

- 재무장관이 초안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형식 : 각 부 장관에게는 2-3일 전 회의 자료(요약분)를 송부, 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재무장관이 논의의 상당부분을 주도
- 수상과 재무장관은 긴밀한 사전 협의 : 회의 수일 전까지 수상과 재무장관은 회의 자료와 진행에 대하여 완전 합의
- 예산 안건만 검토
- 합의 도출을 위하여 장기간 토론하고 수상이 최종 결정
  - 의사결정보다는 합의 유도 과정임을 강조 (Consensus Building)
  -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상이 장기간 노력, 다수결 등의 절차는 없음
- 27개 분야별 지출한도에 대해서만 합의
  - 부처별 총액, 500개 세출항목, 47개 정책분야 등은 재무부와 각 부처간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
  - 3월에 1차 / 8월에 2차 / 9월 국회 제출시까지 미조정
- 1개 분야 내에서 복수의 부처가 경쟁할 경우 : 1차적으로 자율 협의를 요청  
→ 자율 협의 실패시 재무부가 개입

## □ 지출 상한선 유지 방식

- 분야별 지출 상한 검토시 분야별 세부 소요보다는 분야간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방식으로 진행 : 높은 우선순위 분야 증액, 낮은 우선순위 분야 감액 등
- 증액을 주장할 경우 감액 분야를 동시에 제안하도록 의무화
  -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증액과 감액을 동시 제안하도록 의무화

□ 회의 결과 및 대외 공개 수준

- 회의 결과는 예산안 국회 제출시까지 대외비로 유지 : 회의결과는 수상과 재무장관이 공동 서명한 후 각 부처에 배포(대외비)
  - 수상실 · 재무부차관이 직접 3쪽 내외로 정리
- 언론에는 회의 결과에 대한 개략적 브리핑만 실시
- 여건 변화시 9월 국회 제출시까지 지출한도 지속 조정
  - 1993년 제도도입 이후 3월 합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었음

□ 기타

- 친교적 분위기(Social happening)를 강조 : 합의 과정에서 내각 구성원간에 상당한 긴장이 형성되므로 진솔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합숙과 더불어 만찬 등 친교적 분위기를 강조
- 내각회의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한 번의 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내림으로써, 핵심 사항에 집중할 수 있고 한 제안서에 동의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정도의 삭감을 단행해야 한다는 예산 수립 원칙도 명확히 할 수 있음

나. 국회 심의 방식

□ 국회 제출 자료 : 9.20 예산안(Budget Bill) 국회 제출

□ 행정부와 국회 간 협조 방식

- Budget Negotiation : 예산안 국회제출 전에 현 집권당인 소수 여당 사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은 좌파당(The Left) · 녹색당(The Green)과 예산 협상

□ 예산 관련 위원회 및 조직

○ 예산위원회

- 단일 예산위원회가 예산 총계(세수, 세출의 수준과 각 부처별 할당 포함)를 처리. 그리고 부분별 위원회들은 각 세출의 수준에서 지출을 처리. 예를 들어 예산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총 지출의 수준을 결정하지만, 교육위원회의 멤버들은 교육의 각 세출부분에 한도 할당
- 부분별 위원회는 관할 지출 영역에서 세부 지출의 구성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총 지출 규모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총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 부분별 위원회의 제안서는 무효가 되며 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음
- 부분별 위원회 각각은 관할 지출영역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단 하나의 제안서를 마련해야 하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27개의 제안서가 나오게 됨

- 특별 위원(Professional staff) 및 특별예산기구 : 10명 미만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에 부속된 전문적 예산 연구기관이 존재

□ 의회 승인 예산 항목수 : 27개의 분야별 예산 항목이 존재

□ 2단계 국회 심의 방식 (11-12월)

- 1단계(11월) : 지출총액과 27개 지출 분야에 대한 배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부과금 결정
- 2단계(12월) : 소관 위원회별로 지출 분야별 예산을 지출항목별로 배분

□ 의회의 예산 수정 권한 및 형식 : 정부예산안을 수정할 의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허락된다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의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짐

- 예산 수정 실적 : 일반적으로 의회는 행정부가 제시한 예산을 수정 없이 승인

□ 추경 예산 관련 의회 역할

- 더 낮은 수입/더 높은 지출을 가져오는 경제 예측의 변화 · 새로운 정책의 시작 · 다른 지출 승인으로의 펀드의 이전 등의 원인으로 추경 예산이 요구되며, 추경 예산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없이 기본적인 예산규칙을 따름

## 6. 예산 서류

### 가. 내각예산회의 제안서

성격 : 춘계재정계획안 작성을 위한 재무부의 제안서

- 1-2일에 걸쳐 각 부처 장관이 토의하여 정부안 결정

담당기관 : 재무부(MoF)

주요내용

- 향후 3년간의 예산지출총액 및 지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정책변화가 없는 경우의 지출액 전망치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경우의 지출액 전망치로 구분하여 제시

### 나. 춘계재정계획안

성격 : 향후 3년간의 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

-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적 기속력을 가짐

주요내용

- 향후 3년간의 중기재정전망 : 재정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전망, 세목별 세수 실적 및 전망치, 국가채무&재정수지&재정의 지속가능성
-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 상한 및 27개 분야별 지출 상한
- 당해연도 추경예산안

## 다. 예산안(Budget Bill)

성격 : 우리나라의 예산안에 해당

주요내용

### ○ 총괄예산안

- 경제전망 : 춘계재정계획시의 경제전망을 수정
- 지출계획 : 춘계재정계획시의 지출계획을 수정
  - 차기연도(+1년) 지출총액 및 지출 분야별 예산안 확정
  - 차차기연도(+2년) 및 +3 회계연도의 지출전망

① 당해연도 추경예산

② 지출 분야별 예산안 : 27개 분야별 향후 3년간 구체적 지출계획

③ 총 500여개의 예산항목(appropriation)별 향후 3년간 재원 배분 계획

### ○ 세입전망 및 세법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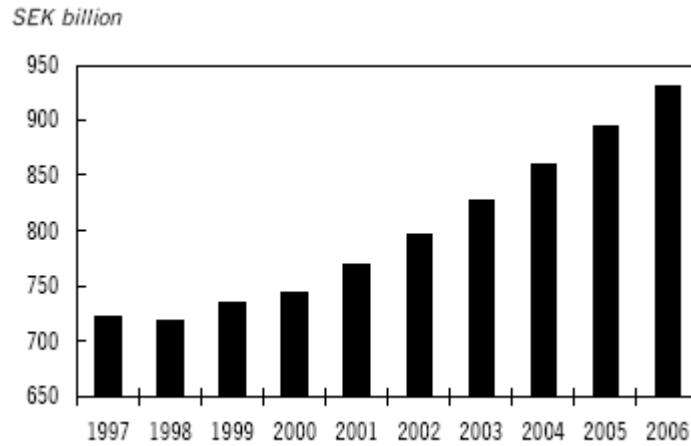
- 직전 2년간 세목별 세수실적, 금년 및 향후 3년간 세목별 전망치

## 라. 정부승인문서(government approval doc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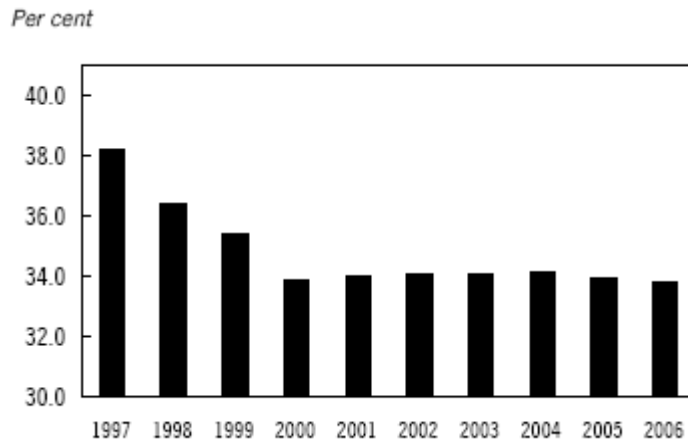
성격 : 정부와 시행청(AGENCY)간의 재원사용 계약 문서

- 시행청(AGENCY)이 감독부처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서를 제시하면 감독부처가 승인한 문건
-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총 500여개의 예산항목)을 시행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문서

<그림 V-1> 지출총액 한도



<그림 V-2> 지출총액 한도



주: FY 1997-2006에 걸쳐서, 지출 한도는 매년 한도의 조정을 가져오는 기술적 변화와 지자체 보조를 위한 회계 절차상의 공표된 변화를 이유로 조정 되어져 왔다.

자료: *Budget Statement and Summary From the Budget Bill of 2004*

<표 V-3> 정부의 지출한도(FY 1999-2002)

(10억 크로나)

	1999	2000	2001	2002
지출한도	753.0	765.0	791.0	812.0
실제지출	751.5	760.0	786.3	811.6

자료: *regeringens proposition 2002*

<표 V-4> 정부의 지출한도, FY 2005-2006 기술적 조정의 지출한도

(10억 크로나)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출한도	812	822	856	890	927
BNP비율	34.7	33.9	33.8	33.6	33.4
기술적 조정이후 BNP비율	33.9	33.9	33.8	33.6	33.4

주: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 지출한도는 2002년에 7930억 크로나, 2003년에 8230억 크로나로 정정됨  
 자료: *regeringens proposition 2002*

## ※ 집행 제도 현황

### 1. 주요 특징 : 스웨덴은 예산비목을 폐지한 상태

- 예산 편성시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별·품목별 세부 소요를 점검
- 집행 시에는 사업목적과 일정 기준하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출 품목을 결정
- IMF · OECD 등 국제기구가 유지하는 경비 성질별 통계는 별도의 통계작업을 통하여 제출 : 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중

### 2. BUDGET MONITORING(사후점검)

- 매월 예산집행 상황 점검
  - 각 부처, 해당 예산 항목별 및 지출 부문별 예산 집행 점검
  - 재무부, 전 부처의 지출 및 수입 실적 점검 (지출 한도, 재정목표 준수 여부 등 점검)
- 향후 지출 전망 : 격월간 금년과 내년도 지출 전망
- 분기별 내각 보고, 반기별 의회 보고

<참고 1> 스웨덴 내각회의자료 개요 (2000.3 내각회의)

가. 개요 (introduction)

- (1) 내각회의 목적
- (2) 회의 진행 순서
- (3) 자료의 목차

나. 요약 (summary)

다. 거시 경제 전망

- (1) 현재 경제 · 재정 여건
- (2) 향후 3개년 전망

라. 중기재정전망 (2000-2003년)

- (1) 주요 전제 및 전망방식
- (2) 재정 목표
- (3) 수입 전망
- (4)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경우 향후 분야별 지출 전망과 예비 자원
- (5) 중앙 정부의 재정 수지, 부채, 이자지출
- (6) 노령 연금
- (7) 지방 재정
- (8) 일반 정부
- (9) 재정 지출의 거시 경제에 대한 민감도

마. 지출 삭감안과 2000년 추경예산안

- (현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완하는 성격)
- (1) 2000년 지출 상한 (기존의 확정된 지출 상한, 확정되지 않은 지출 상한, 일선부처의 지출 전망 Bias)
  - (2) 2000년 추경의 쟁점 사항

바. 정책적 우선순위 (수사적 성격)

- (1)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 (2) 저소득 연금수령자 관련 사항

- (3) 아동·가정 정책
- (4) 기타 재정 지출 정책 변화 사항
- (5) 재정 지출 분야 정책적 우선순위 요약
- (6) 조세 정책

사. 재정 목표와 지출 상한

- (1) 개요
- (2) 재정 흑자 목표와 재정 정책 방향
- (3) 재정 지출 상한 제안 : 주요 결정 원칙, 재무장관(안)
- (4) 재정 지출 상한 초과 가능성 분석
- (5) 조세 정책
- (6) 기타 주요 재정 개혁 사항

아. 재정 지출 분야별 검토

자. 노후 연금 세부 검토

<참고 2> 분야별 지출 및 지출한도

(자료: *regeringens proposition 2002*)

<표 V-5> 2003년과 2003년 춘계재정계획 법안 사이의 2004년 지출 한도의 변화

10억 크로나	2004
2003년 예산 법안의 지출 한도	851,4
새로운 건축정책 및 지출 개혁	-10,7
변화된 거시 경제전망치	4,1
조정된 가격 및 임금 변동	0,6
규모의 변화	5,9
기술적 조정	3,0
기타	0,6
보조금 수익의 변화된 예산안	-0,1
총 지출의 변화량	3,5
2003년 당해 춘계재정계획 법안의 지출 한도의 변화	854,9

<표 V-6> 분야별 지출 (FY 2002-2003)

10억 크로나 지출 분야	2002			2003			
	결과	초기예산 <sup>1</sup>	추가예산 <sup>2</sup>	총 책정액 <sup>3</sup>	예산안	예산안과 초기 예산의 차이	예산안과 총 책정액의 차이
1 국가위원회	7,3	7,3	0,3	7,7	7,9	0,6	0,2
2 사회 경제 및 재정 경영	8,8	9,1	0,0	9,1	9,1	0,0	0,0
3 조세, 관세 및 법의 집행	8,0	8,3	0,0	8,3	8,2	-0,1	-0,1
4 사법 기관	24,1	24,6	0,2	24,8	24,7	0,1	-0,1
5 국제 협력	1,1	1,3		1,3	1,2	0,0	0,0
6 취약 시의 방어와 대비책	44,6	44,7	-0,0	44,7	44,5	-0,2	-0,2
7 국제 원조	15,7	17,1	-0,1	17,1	17,2	0,0	0,1
8 이민자와 정치 망명자	6,7	7,1	0,2	7,4	7,5	0,3	0,1
9 보건, 간호 대책 및 사회 보호	31,0	33,4	0,6	33,9	34,5	1,1	0,5
10 질병 및 장애 시 경제 안정화	112,9	119,4	-0,9	118,5	121,0	1,6	2,5
11 노후 경제 안정화	33,8	52,5		52,5	52,0	-0,5	-0,5
12 가정과 아동을 위한 경제안정화	50,2	52,9	-0,5	52,4	52,4	-0,4	0,0
13 노동 시장	61,0	60,3	-0,6	59,8	63,2	2,9	3,5
14 노동 환경	1,1	1,1	0,0	1,2	1,1	0,0	0,0
15 학자 지원	20,7	21,6	-0,3	21,3	20,7	-0,9	-0,6
16 교육 및 대학 연구	40,9	42,4		42,4	42,1	-0,3	-0,3
17 문화, 미디어, 종교, 여가	8,1	8,4	0,0	8,4	8,3	-0,1	-0,1
18 사회 설계, 주택 공급 및 건축	8,7	9,5	-0,1	9,3	9,5	0,0	0,2
19 지역 평등과 발전	3,4	3,6	-0,0	3,6	3,8	0,2	0,2
20 공공 자연 환경 보호	2,9	3,4	-0,2	3,2	2,7	-0,6	-0,5
21 에너지	2,3	1,7		1,7	2,2	0,5	0,5
22 통신	24,4	25,9	-0,5	25,4	24,9	-1,0	-0,5
23 농, 임, 수산업 및 관련 산업	13,9	10,5	-0,2	10,3	9,6	-0,8	-0,6
24 산업	3,5	3,5	-0,1	3,4	3,4	-0,1	0,0
2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조금	102,3	68,5	2,5	71,0	72,4	3,9	1,4
26 국가 채무이자 외	67,3	54,5		54,5	42,1	-12,4	-12,4
27 유럽 공동체 (EC) 내 지출	20,6	23,7		23,7	20,3	-3,4	-3,4
보조금 수익의 감소		0,4				-0,4	
<b>총 지출부문</b>	<b>725,3</b>	<b>716,6</b>	<b>0,5</b>	<b>716,7</b>	<b>706,6</b>	<b>-9,9</b>	<b>-10,1</b>
<b>국가 채무이자 제외 총 지출부문</b>	<b>658,0</b>	<b>662,1</b>		<b>662,3</b>	<b>664,5</b>	<b>2,4</b>	<b>2,3</b>
<b>국가 예산에 비한 노후 연금제도</b>	<b>153,6</b>	<b>156,0</b>			<b>157,1</b>	<b>1,1</b>	
<b>비용 한계 지출</b>	<b>811,6</b>	<b>818,1</b>			<b>821,6</b>	<b>3,5</b>	
<b>예산 차익금</b>	<b>0,4</b>	<b>0,9</b>			<b>0,4</b>	<b>-0,5</b>	
<b>국가의 비용 한계</b>	<b>812,0</b>	<b>819,0</b>			<b>822,0</b>	<b>3,0</b>	

상기 액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항상 총액이 일치되지는 않음

주<sup>1</sup> 2002년 12월 국회의 결정에 따른 국가 예산

<sup>2</sup> 법안 2002/03:46 유로화 도입에 관한 국민 투표 및 현안 내 추가 예산안에 따른 국회의 결정

<sup>3</sup> 책정된 예산 (법안 2002/03:46 유로화 도입에 관한 국민 투표) 및 현안 내 추가 예산안

<표 V-7> FY 1997-2006의 지출 및 FY 1997-2002의 실제지출, FY 2003의 예산안, FY 2004-2006의 추정치

단위 : 10억 크로나

지출 분야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국가위원회	3,9	4,3	4,5	4,8	5,4	7,3	7,9	7,9	7,8	8,2
2 사회 경제 및 재정 경영	10,6	10,0	9,1	8,9	9,6	8,8	9,1	9,7	10,1	10,1
3 조세, 관세 및 법의 집행	7,0	7,2	7,3	7,6	7,8	8,0	8,2	8,6	8,8	8,9
4 사법 기관	19,9	20,1	20,9	21,9	22,8	24,1	24,7	25,8	26,2	26,8
5 국제 협력	2,5	2,6	2,9	3,0	3,0	1,1	1,2	1,3	1,3	1,3
6 취약 시의 방어와 대비책 <sup>9</sup>	40,9	42,4	44,3	46,2	44,9	44,6	44,5	44,4	45,6	46,6
7 국제 원조	12,1	11,5	12,4	15,3	17,0	15,7	17,2	19,9	20,9	21,9
8 이민자와 정치 망명자	3,6	4,2	4,4	4,5	5,3	6,7	7,5	7,0	7,2	7,2
9 보건, 간호 대책 및 사회 보호	24,2	23,1	24,5	28,6	29,5	31,0	34,5	37,3	38,5	39,9
10 질병 및 장애 시 경제 안정화 <sup>1</sup>	35,7	39,7	88,5	97,9	107,3	112,9	121,0	125,0	131,6	136,8
11 노후 경제 안정화 <sup>2</sup>	63,1	62,7	34,5	33,5	33,8	33,8	52,0	51,4	50,2	49,4
12 가정과 아동을 위한 경제안정화 <sup>3</sup>	32,6	35,9	41,2	44,6	48,3	50,2	52,4	54,1	55,9	57,1
13 노동 시장 <sup>4</sup>	78,2	75,3	75,4	65,6	58,6	61,0	63,2	59,8	56,3	55,5
14 노동 환경	4,5	1,6	1,3	1,3	1,0	1,1	1,1	1,1	1,1	1,1
15 학자 지원 <sup>5</sup>	16,0	21,9	19,7	19,7	19,1	20,7	20,7	21,3	22,2	23,2
16 교육 및 대학 연구 <sup>9</sup>	25,1	27,7	29,1	31,4	33,3	40,9	42,1	44,1	45,9	47,2
17 문화, 미디어, 종교, 여가	7,2	7,3	7,6	7,6	7,8	8,1	8,3	8,6	8,9	9,1
18 사회 설계, 주택 공급 및 건축	30,8	22,2	17,1	11,7	10,4	8,7	9,5	8,9	9,3	9,6
19 지역 평등과 발전	2,9	3,4	3,7	3,0	3,3	3,4	3,8	3,6	3,0	3,0
20 공공 자연 환경 보호	1,9	1,7	1,9	2,0	2,4	2,9	2,7	3,8	3,6	3,7
21 에너지	0,6	0,9	1,1	1,7	2,0	2,3	2,2	1,3	0,5	0,5
22 통신	24,3	27,2	25,4	25,2	24,3	24,4	24,9	28,1	29,8	30,3
23 농, 임, 수산업 및 관련 산업	10,9	11,8	11,9	9,7	76,6	13,9	9,6	14,2	14,4	14,3
24 산업	3,1	2,8	3,2	3,8	3,3	3,5	3,4	3,4	3,5	3,6
2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조금 <sup>6</sup>	87,3	96,8	102,5	97,5	100,3	102,3	72,4	73,1	73,0	73,0
26 국가 채무이자 외 <sup>7</sup>	98,4	113,4	89,9	90,2	81,3	67,3	42,1	45,6	48,3	54,6
27 유럽 공동체 (EC) 내 지출	20,2	21,2	20,9	22,3	23,3	20,6	20,3	23,8	25,2	25,8
보조금 수익의 감소								1,6	6,4	5,6
<b>총 지출 부문</b>	<b>667,6</b>	<b>699,7</b>	<b>705,2</b>	<b>709,6</b>	<b>722,0</b>	<b>725,3</b>	<b>706,6</b>	<b>734,6</b>	<b>755,4</b>	<b>774,4</b>
<b>국가 채무이자 제외 총 지출 부문</b>	<b>569,2</b>	<b>585,7</b>	<b>615,3</b>	<b>619,4</b>	<b>640,8</b>	<b>658,0</b>	<b>664,5</b>	<b>689,1</b>	<b>707,1</b>	<b>719,7</b>
국가 예산에 비한 노후 연금제도 <sup>8</sup>	129,7	132,3	136,2	140,7	145,5	153,6	157,1	165,8	172,0	182,3
<b>비용 한계 지출</b>	<b>698,9</b>	<b>718,0</b>	<b>751,5</b>	<b>760,0</b>	<b>786,3</b>	<b>811,6</b>	<b>821,6</b>	<b>854,9</b>	<b>879,1</b>	<b>902,1</b>
예산 차익금	24,1	2,0	1,5	5,0	4,7	0,4	0,4	1,1	10,9	24,9
<b>국가의 비용 한계</b>	<b>723,0</b>	<b>720,0</b>	<b>753,0</b>	<b>765,0</b>	<b>791,0</b>	<b>812,0</b>	<b>822,0</b>	<b>856,0</b>	<b>890,1<sup>10</sup></b>	<b>927,0<sup>10</sup></b>

- 주<sup>1</sup> 1999년 지출은 415억 크로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242억 크로나는 개정된 재정의 책임 범위 내, 114억 크로나는 노후 연금 제도 개혁의 결과로 증가된 국가의 노후 연금 제도의 지출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지출은 노동 상해 보험이 국가 예산에 조달된 결과로 6억 크로나 증가한다. 2003년에 지출은 더 늘어난 조기 연금 수혜자들로 인해 그들을 위한 특정 기본 공제가 폐지 및 보상됨으로써 29억 크로나 증가한다.
- <sup>2</sup> 1999년 지출은 노후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개정된 재정의 책임 범위의 결과로 294억 크로나 감소하나, 동시에 부문 연금이 국가 예산에 조달되어, 6억 크로나 증가한다. 2003년 지출은 국민 연금의 지출 중 주거지 기초 부문이 국가 예산 (70억 크로나) 및 국민 연금, 연금의 증가가 과세된 보장 연금 (95억 크로나)으로 보상되어지고, 노후 연금 제도로부터 양도되어서 165억 크로나 증가한다.
- <sup>3</sup> 1999년 노후 연금 제도 개혁에 따라 국가의 노후 연금 제도의 비용이 반입되어, 지출은 48억 크로나 증가한다.
- <sup>4</sup> 1999년 노후 연금 제도 개혁에 따라 국가의 노후 연금 제도의 비용이 반입되어, 지출은 27억 크로나 증가한다.
- <sup>5</sup> 1999년 노후 연금 제도 개혁에 따라 국가의 노후 연금 제도의 비용이 반입되어, 지출은 6억 크로나 증가한다.
- <sup>6</sup> 총체적으로 지출 부문 25에서는 2000년 -48억 크로나, 2001년 -30억 크로나, 2002년 -35억 크로나, 2003년 -80억 크로나의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다. 2000-2002년 소득세 개혁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지원금은 2000년 48억 크로나, 2001년 50억 크로나, 2002년 52억 크로나 감소한다. 2001년 국가 지원금은 중, 저소득층을 위해 높아진 기본 공제의 결과로 18억 크로나 증가한다. 동시에 2002년 국가 지원금은 1억 크로나 감소하는데, 이는 노동조합 지방분국의 지출을 위한 공제 법령이 세금 감소로 보상되어졌기 때문이다. 2003년의 감소는 조기 연금 수혜자들을 위한 특정 기본 공제가 폐지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이 29억 크로나 증가한 것으로 또한 설명되어 진다 (지출 부문 10 참조). 더 나아가 2003년 국가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소가 공제로 보상되어진 것에 기인하여 43억 크로나 증가한다. 200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지원금이 같은 액수로 약 310억 크로나 감소되는 사이 지방자치체계는 국가 예산의 수입부문으로 옮겨졌으며, 이는 전 해와 관련하여 2003년 국가 지원금의 감소를 설명한다. 국가 지원금은 또한 BP 2003에 제한된 세금 변동에 따른 결과로 25억 크로나 기본 공제의 증가에 따라 하향 조정되어졌다. 조정 사안은 정부가 결정한 증가된 세금변동 (5억 크로나) 역시 다루게 된다 (법안 2002/03:1, bet 2002/03:FiU3, rskr 2002/03:87, 2002/03:88).
- <sup>7</sup> 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p>8</sup> 1999년 지출은 노후 연금 제도 개혁에 따라 변화된 재정의 책임 범위에 따른 결과로 46억 크로나 증가한다. 2003년 지출은 국민 연금의 주거지 기초 일부분을 위한 국가 예산의 지출 부문 11로 옮겨져 70억 크로나 감소한다.
- <sup>9</sup> 국가 계약 보험을 위한 변화된 재정의 책임 범위에 따른 결과로, 2000년 지출 부문 6 *취약 시의 방어와 대비책* 내 14억 크로나의 지출을, 지출 부문 16 *교육 및 대학 연구* 내 16억 크로나의 지출을 증가시켰다 (법안 1999/2000:1 참조).
- <sup>10</sup> 지출 한도의 기술적 평가